

## 한국의 새로운 이방인, 이주민과 새터민

정귀순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 한국사회의 이주, 그 새로운 현상

1987년은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뿐 아니라 이주노동의 역사에서도 전환점이었다. 그 무렵 해외로 일하러 떠나는 한국인은 거의 사라졌고, 대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오기 시작하였다. 서울 아시안 게임이 끝난 이듬해인 1987년 봄 필리핀 출신 가정부들이 서울 강남에서 일한다는 기사가 일간지에 실렸고, 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탄생을 알리는 첫 신호였다.<sup>1)</sup>

그 후 1991년 공식적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소위 3D업종에 외국인력 도입이 시작되었고, 그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07년 현재 약 42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취업 중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이해되는 한편, 이들을 ‘노동력’의 관점으로만 파악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단기순환 고용정책의 고수, 전체 이주노동자의 50%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추방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추방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잘 표현되고 있다.<sup>2)</sup>

1) 설동훈, 2003,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2003년 : 이주노동자의 저항의 기록」, 진보평론 17호

그러나 다른 한편, 2000년 이후 한국의 이주민문제는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로, 1990년 1.2%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이 2006년에는 전체 결혼 100쌍 중 12쌍이 국제결혼을 하여 (11.9%), 10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국제결혼 추세라면 2020년이면 국제결혼이민자 2세만 1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의 급증은 이들의 사회 적응과 통합의 문제, 그리고 그 자녀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군사독재정권 이후 강력한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는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그동안 ‘몰이해와 동화’의 관점으로 일관했던 한국 내 화교들의 문제에 대한 반성과 재조명, 그리고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이후 중국 및 제 3국으로의 탈북과 한국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지던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이주민의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 사회는 다민족·다인종 국가,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의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새터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 1) 이주노동자의 유입

한국사회는 1902년 12월 121명으로 구성된 최초의 조선인 미주이민

2) <표1 :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출처 : 법무부

2006.12 현재 (단위 : 명, %)

체류외국인 (등록 + 미등록)	체류자격별 현황*							미등록 체류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전 외국인)	외국적 동포	외국인 유학생	난민 인정자	
	전문기술 인력*	숙련생산 기능인력	단순기능 인력					
910,149 (100.0)	24,501 (2.7)	0 (0.0)	296,919 (32.6)	93,786 (10.3)	267,436 (29.4)	30,101 (3.3)	52 (0.1)	211,988 (23.3)

\*체류자격별외국인은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수치이다.

\*전문기술인력은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 직업, 예술홍행, 특정직업 사증소지자이다.

단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이주를 시작한 후 멕시코의 커피농장, 그리고 1910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이후 탄압을 못 이겨 만주와 사할린으로 이주해 간 동포들이 지금도 조선족, 고려족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1960년대와 70년대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베트남전에 군인을, 중동지역에 건설노동자를 보내 근대화 과정에 달러를 벌어들였던 전형적인 인력수출국이었다.

이후 경제성장을 거쳐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일자리가 보장되고 임금수준의 상승으로(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그 주요한 분수령이다) 더 이상 해외로의 노동이주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오히려 1980년대 말 노태우정권 시절 ‘주택 500만호 건설’ 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업을 비롯한 소위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치자 제조업과 건설업, 수산업에 외국 인력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남북한의 분단 이후 사회주의 국가와의 국교단절로 방문이 중단되었던 중국동포들의 경우 1991년 한중수교 체결로 문호가 개방되자 관광비자로 혹은 친지방문을 이유로 입국하여 한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심한 노동 강도를 피해 하나 둘 빠져나가고 있던 중소제조업체, 건설현장, 식당, 농장, 어장, 유흥업소와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노동시장의 최하층을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과 함께 서서히 채워가게 되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동남아시아의 젊은이들에게 노동이주를 꿈꾸는 나라가 되어 1990년대 이후 한국은 해외로 나가는 노동이민이 급격히 줄고 이주노동자들이 대량 유입되는 ‘이민노동의 전환기’(migration transition)를 맞았다. 그리하여 2007년 현재 약 42만 명, 공식적으로 외국 인력의 도입이 시작되었던 1991년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취업 중이다.<sup>3)</sup>

## 2) 이주노동자의 인권현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으로 폐쇄해졌던 한국사회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정작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한국사회에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이들의 비인간적인 노동현실과 심각한 인권실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부터였다. 1994년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한 이주노

동자들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산재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에 이어, 1995년 1월 명동성당 앞에서 네팔출신의 연수생 13명이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라고 외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삶과 심각한 인권현실이 알려져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87년 민주화투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이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만 바뀐 것이었다. ‘한국인 노동자’에서 가난한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말이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현실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값싼 노동력 공급’이라는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3)

<표5 : 연도별·체류자격별 이주노동자 수>

출처 : 법무부(단위 명)

	전 체	취업비자	연수비자		미등록노동자 (불법체류자)
			해외투자 기업연수생	산업연수생	
1990	21,235	2,833	0	-	18,402
1991	45,449	2,973	599	-	41,877
1992	73,868	3,395	4,945	-	65,528
1993	66,919	3,767	8,644	-	54,508
1994	81,824	5,265	9,512	18,816	48,231
1995	128,906	8,228	15,238	23,574	81,866
1996	210,494	13,420	29,724	38,296	129,054
1997	245,399	15,900	32,656	48,795	148,048
1998	157,689	11,143	15,936	31,073	99,537
1999	217,384	12,592	20,017	49,437	135,338
2000	285,506	19,063	18,504	58,944	188,995
2001	329,555	27,614	13,505	33,230	255,206
2002	357,460	28,560	14,035	25,626	289,239
2003	388,816	200,039	11,826	38,895	138,056
2004	421,641	196,603	8,430	28,125	188,483
2005	345,699	126,617	6,142	32,148	180,792
2006.7.31	401,684	171,976	6,590	35,112	188,006

주) 기준시점은 각 연도 12월 31일자이다

\* 2003년 미등록노동자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2003년 7월 31일 ‘고용허가제(외국 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직후 실시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로 인한 것이다.

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용인한 한국정부의 외국인력정책과 제도의 문제였고, 둘째, 이주노동자와 국적을 뛰어넘어 연대의 전략을 세우지 못한 한국노동운동의 문제,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를 문화와 인격을 가진 대등한 한사람의 인간으로 이해하기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이들이라고 해서 쉽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낮은 사회적 인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

한국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은 한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산업과 업종에 취업을 허용하되,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단신노동, 그리고 3년 이내 취업을 허용하는 단기로테이션정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91년부터 실시되어 온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산업연수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노동법의 적용을 피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비인권적 측면 때문에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해 왔다. ‘현대판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제(Industrial Trainee System)를 폐지하고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입법청원이 있는 지 8년 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허가제, Employ Permit System)이 입법되었다. 2003년 여름의 일이다. 그리고 2007년 1월, 법 제정 이후 병행 실시되어 오던 산업연수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완전히 통합 시행됨으로써 그 질긴 생명을 마감했다.

고용허가제 도입의 주요한 의의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인권개선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체감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인권문제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사업주의 고용계약 해지, 휴업, 폐업,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노동조건 저하 등 더 이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3회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1회 추가) 인정된다. 그리고 반드

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알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작업장 환경 및 작업내용상의 문제나 내국인노동자와의 갈등, 일상적인 언어폭력 등의 태도 등의 문제로 사업장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짧은 3년조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에 오기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묵묵히 참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면 업체를 이탈하여 결국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표1 :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중 미등록체류외국인 참고)

### 둘째,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과도한 단속과 추방으로 인한 인권침해

한국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강력한 단속과 추방’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단속실적 위주로 진행되는 과잉단속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도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다리 골절 등과 같은 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2003년 고용허가제 국회통과 후 실시된 미등록이주노

- 4) 「공변의辯, ‘원칙’으로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중에서, 정정훈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내국인 고용기회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는가?
- 그 대답으로서의 고용허가제 시스템 그리고 그것에 합의했던 우리의 인식은 목적·수단 범주에 지배된 폭력성의 한 표현이다. 계약의 성립, 특히 근로계약의 성립은 대등한 당사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사업장변경 제한을 통해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를 사실상 종속적인 위치에 놓고 고용허가제 법의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생활상의 차별들을 감수해야한다는 명령, 사업장을 떠나려면 이 나라를 떠나거나 시스템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사형선고의 섬뜩한 강제, 그것이 바로 고용허가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놓인 폭력적 기초이며 형식적으로 평등하고 중립적인 법 규정과 계약의 이면에 놓여 있는 칼날이다.
-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제한은 고용허가제 법으로 규제하지 않거나, 규제할 수 없는 인권침해·차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결과적으로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으며, 저임금의 종속적 위치에 강제된 이주노동자를 한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제한은 내국인 고용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선택을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도 아니다.....”

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으로 강제단속의 공포에 견디지 못해 자살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다라카씨, 네팔이주노동자 리튼씨, 중국동포이주노동자 김원섭씨 등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2006년 2월 강제추방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터키노동자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추락사망사건에 이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무리한 단속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추락사망사건, 2007년에 접어들어 2월 여수의 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으로 추방대기 중이던 1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기업 뿐 아니라 정부기관에서조차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몹시 안타까울 따름이다.<sup>5)</sup>

#### 4)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독일의 경우, 소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산업화 과정에서 대규모 생산과정의 대기업·대공장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였고, 내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조직화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기술개발·기계화기업의 해외이전의 전 단계에서 혹은 그것이 어려운 영세한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국내 노동자, 특히 대기업·정규직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들의 이해와 크게 충돌지점이 없었다. 따라서 국내 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혹은 무개입으로 이주노동자는 노동시장 구조에서 최하층을 차지하고 동시에 권리보호와 조직화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신 한국사회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었다. 2006년 현재 전국에 약 145개의 단체들이 이주노동자지원활동을 하고 있다.<sup>6)</sup>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기업들에서 ‘배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겨

5)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中 ‘제3장 2절 단속과 보호철차 상의 문제점’ 및 2006년 5월 ‘이주노동자인권연대’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 및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참고

6) 설동훈·이관주, 2006. 7.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기관) 제도개선 및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근로복지공단연구용역보고서

왔던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활동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제도적 문제점을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해 온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원으로 이주노동자들은 국가별 공동체 등 다양한 자신들의 모임을 만들어 정보교환과 문화행사개최 뿐 아니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2년 한국사회에서 최초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으로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의 이주지부>를 발족하였으나, 조합원 대부분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활동이 쉽지 않았다. 2003년 11월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300여일의 긴 농성을 거치며, 2005년 이주노동자들의 독자적인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다시 발족했다. 이에 노동부는 조합원의 다수가 미등록체류자라는 점을 들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했지만, 2007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동부의 이주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한국사회와 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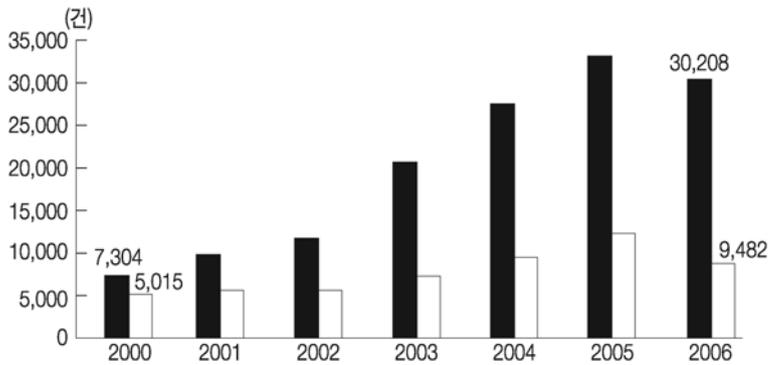
### 1) 결혼이민자 현황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의 전체 결혼 100쌍 중 12쌍(혼인 332,752건 중 39,690건으로 11.9%)이 국제결혼을 하여, 2005년의 13.6%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었지만 1990년 100쌍 중 한 쌍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주노동자 유입과 함께 남성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한 국제결혼의 70% 이상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한국인 남성과 이주여성의 결혼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해 전체 이혼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가족의 이혼은 크게 증가(46.8% 증가)하여 이들의 삶이 순탄치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통계청 / 건, %)

연 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1990	399,312	4,710 ( 1.2)	619 (0.2)	4,091 (1.0)
1995	398,484	13,494 ( 3.4)	10,365 (2.6)	3,129 (0.8)
2000	334,030	12,319 (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0)	9,482 (2.8)
1990-2005	2,690,713	165,257 ( 4.1)	178,299 (2.7)	45,369 (1.4)

<도표6>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 추이



<표 4>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 현황 (법무부 / 건, %)

출신국	인원수	출신국	인원수
중 국	14,608 (48.4)	캄보디아	394 (1.3)
베 트 남	10,131 (33.5)	미 국	334 (1.1)
일 본	1,484 (4.9)	우즈베키스탄	314 (1.0)
필 리 핀	1,157 (3.8)	기 타*	1,192 (3.9)
몽 골	594 (2.0)	계	30,208 (100.0)

\*기타: 구소련, 동유럽, 아시아 저개발국, 아프리카, 중남미, 선진국 등 포함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의 약 90%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시아 국가로, 이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난이다. 이주노동자로 해외취업의 길에 나서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빈국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이민자가 되고 있다.<sup>7)</sup>

둘째,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남아선호의 결과 결혼시장에서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전체의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이런 현상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 바로 결혼중개업소들로, 내국인간의 결혼중개업이 어려워지자 국제결혼사업에 뛰어들어 결혼중개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 특히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이중의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 받고 있어, 온 가족이 행복한 삶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결혼이민자들과의 사회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의 갈등요인이자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어서 중요한 시점에서 있다.

## 2) 결혼이민자의 인권

결혼이주민에게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은 바로 한국사회로의 정착과정이 대단히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어려

---

7)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pp8

움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첫째, 제도적인 문제점

결혼 후 외국인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신분의 불안정함이다. 현행법 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은 상실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주여성들은 다양한 인권침해를 감당해야 했고 심지어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겪게 되는 법적, 제도적 불이익의 대부분은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한 2년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부계혈통 위주의 국적법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받아들인 점에서는 진일보하였으나, 위장결혼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하향평준화 되었다. ‘위장결혼방지’라는 명목 하에 실시하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이 신분이 불안한 외국인 배우자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sup>8)</sup> 2004년 4월부터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혹은 한국인과 사이에선 태어난 자녀를 양육할 경우 귀화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법과 제도는 이렇게 개선되었음에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한국문화와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밝히고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국내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 여성들이 관련 자료를 구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국가가 공인하는 여성관련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도 귀책사유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2006년 5월 발표된 법무부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고무적이다.

8) 2004년 4월부터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혹은 한국인과 사이에선 태어난 자녀를 양육할 경우 귀화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법과 제도는 이렇게 개선되었음에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한국문화와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밝히고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국내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 여성들이 관련 자료를 구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국가가 공인하는 여성관련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도 귀책사유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2006년 5월 발표된 법무부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고무적이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 빈국출신 여성간의 결혼이 매매혼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고, 국익이라는 이름하에 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는 국가정책,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 및 혈통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힌 국민들의 우월성이 결합하여 자기파괴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둘째, 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

최근 한국사회의 급속한 국제결혼의 증가는 결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의 맹활약이 큰 몫을 했다.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여성들의 인생은 그들이 제공하는 거짓정보로 파괴되고 있으며, 알선을 통한 결혼은 매매형식을 띠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인신매매적 요소는 국가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sup>9)</sup>

대개 남성들은 결혼정보업체에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다수의 시댁가족들과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들이 구입한 하나의 상품처럼 여겨, 다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들은 “내가 너를 얼마를 주고 데려왔는데,”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여 이들 여성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한다. 결혼알선업체의 횡포와 거짓 정보로 파괴되는 것은 비단 이주여성만이 아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한국인 남성 배우자도 피해자이기도 마찬가지다.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들은 이주여성들의 폭력피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의 거짓정보에 의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아내가 며느리가 언제든 지 도망갈 수 있다는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온 가족이 이주여성을 지키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도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이주여성의 고립, 전화차단, 외출금지 등)를 서슴없이 행한다.

9) 지난 4월 21일 조선일보의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남성을 '왕자로, 베트남 여성을 '왕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여성'으로 묘사했다. 이 기사는 베트남 여성을 상품화하는 결혼중개업체의 광고 수준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고 한 나라의 일간지가 다른 나라의 여성을 노골적으로 상품화한 기사함으로써 국내 베트남 여성들의 강한 분노는 물론이고 베트남여성연합회 주석과 전 베트남 총리가 공식적으로 분노와 치욕감을 토로하는 등 강한 분노와 항의를 받았다.

때로 이러한 행위는 결혼알선업체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업주들이 사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신고업인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며, 더 이상의 국제결혼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

### 셋째, 사회적 편견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결혼 후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가 태어나 부모가 되어도 여전히 외국인취급을 받는다. 취업과정에서도 엄연히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임에도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한국보다 상대적 빈국출신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들로부터의 무시와 편견에 깊이 상처받고 있다. 사회·문화적 편견의 대부분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빚어지는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 한국사회 교육과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분적인 면만을 강조한 언론의 책임도 있다.<sup>10)</sup>

## 3. 한국사회와 새터민<sup>11)</sup>

### 1) 귀순용사, 탈북자, 새터민

1990년대 초까지 남북의 체제경쟁 차원에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대부분 군인출신으로 귀순용사(歸順勇士)라 불리며 북한의 호전성과 비인간성,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정치적 가치가 큰 존재로 이들은 남한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로인해 이들은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사회 적응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1995년 북한의 대홍수와 심각한 식량난은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사태를 불러왔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을 넘어 식량을 구할 목적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들 중 중국과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sup>12)</sup>

10) 지구촌 오지마을만을 보여주는 모 TV 프로그램을 본 일부 한국인들은 TV에서 본 오지마을의 모습이 그 나라 전체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편견을 갖게 만들기도 했다.

11) 2005년 1월 10일부로 통일부에서 '탈북자'라는 용어를 '새터민'으로 바꾸었다. '탈북자'라는 단어가 편견과 거부감이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새터민'으로 바꾸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귀순용사(歸順勇士)에서 탈북자 혹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불리다 이제 새터민으로 불리게 되었다.

<표> 국내입국 북한 이주민 현황 (출처 : 통일부/2005년 12월 기준)

연도	1991 이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원	625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7,687

2000년 이후에는 새터민의 탈북동기, 탈북형태, 입국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 및 어린자녀와 청소년 등 가족동반 입국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탈북동기에서 식량을 구하겠다는 생존차원의 동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민 성격의 탈북주민이 증가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중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탈북하는 이들이 증가하였고, 이들 중에는 북한의 최하층 보다는 중상류층에 속했던 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미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한 이들이 브로커들을 통해 북한 또는 중국에 체류 중인 가족성원들을 데려오는 가족결합 성격의 탈북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으로서의 성격, 이주노동자로서의 성격, 이산가족으로서 성격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이주민으로 볼 수 있다. 13)

## 2) 새터민의 한국정착 현실과 문제점

북한주민들에게 탈북은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모험이다. 게다가 탈북 이후 중국 등지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항상 체포와 송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기약 없는 유랑생활을

- 12) 윤인진, 2006.12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한국사회학회 pp80
- 13) \*난민 : 대한민국 헌법 상 북한주민도 한국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현행 법령은 재외 공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의사를 표시하고 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결정이 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보호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한국에 이미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여 미국망명이나 난민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한국에 정착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한국헌법에 따라 한국 국적자로 간주되더라도 북한 출신자로 여겨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신청 자격에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 \*이주노동자 :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제3국에 머무는 동안 불법체류 상태로 노동을 하게 되고, 한국 입국을 위해 중개단체나 지원 단체들을 통해 중국에서 몽골, 태국, 캄보디아 등 국경을 넘게 되고 한국 입국 후에도 이주노동자와 같이 대부분 3D업종 등에서 일하고 있다.
- \*이산가족 : 가족이 함께 한국에 입국하면 다행스런 일이지만, 대부분이 가족의 일부가 북한에 남아 있거나, 중국 체류 시 불안한 신분 때문에 중국인과 동거하는 경우, 한국 입국 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가족을 데려오려고 하거나, 한국인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 등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이 되고 있다.

지속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권유린과 탈북여성들의 인신 매매는 심각한 수준으로, 약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재중 북한난민의 인권문제는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그나마 한국에 입국한 북한난민은 이런 어려움으로부터는 벗어나겠지만, 한국사회로의 정착과정은 그다지 순탄하지 못하다.

#### 첫째, 문화적 이질감과 사회적 차이

새터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문화적 이질감과 체제의 상반된 환경 속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이다. 특히 전체 새터민의 20%를 차지하는 청소년의 경우 탈북 이후 한국 입국과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탓에 이들의 학력결손 비율은 90%에 이른다. 이는 한국 정착 이후 남한에서 정규학교의 진학 등 사회적응의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sup>14)</sup>

#### 둘째, 사회적 편견

남북한의 언어, 가치관, 사고방식과 사회제도 등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도 있지만, 남한사람들의 새터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남한에 연고가 없는 새터민들은 탈북 이후 대부분 종교단체들로부터 물질적·정신적 도움을 받아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활동은 비교적 활발하지만, 그 외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결국 같은 새터민들끼리 어울리게 된다.

#### 셋째, 경제적 어려움

현재 새터민의 다수는 정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기 정착지원금으로 정착금과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각종 지원금이나 생계급여 등의 혜택 위주의 정착지원제도로는 새터민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연령층의 30~40% 정도가 실업상태에 있고,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혹은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고

14) 임형진, 2006. 8 「새터민 청소년의 현실과 가족해체 문제 해결방안」, 『새터민가족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pp89

실업·저소득으로 대부분이 정부의 생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 넷째, 건강 문제

새터민들은 북한이탈과정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불법 장기체류, 그리고 한국으로의 입국과정에 이르기까지 기아와 인신매매, 폭력과 구금, 강제송환 시 고문과 처벌 등에 대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였다. 이미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한국 입국 후 문화적, 사회적 갈등과 부적응에 따른 소외감과 열등감으로 다수의 새터민들의 건강상태는 만성질환과 질병수에 있어 남한주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런 건강상태는 취업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sup>15)</sup>

따라서 새터민들에게는 한국입국 직후 초기에 좀 더 전문적인 상담과정이 필요하며, 인권과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상담을 비롯하여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 4.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2006년 말 한국 내 체류 이주민의 수는 91만 명을 넘어섰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2005년 현재 1.08명)을 기록하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 인력은 항상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sup>16)</sup>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된 지 올해로 만 16년, 그 사이 한국 사회에는 ‘이주민’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으며, ‘이민사회’로의 전환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sup>17)</sup>

한국정부는 2006년 5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슬로건으로, 인권 및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새로운 외국인정책을 발표했다.<sup>18)</sup>

그리고 2007년 4월 27일 <재한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의 입법, 이민행정기구의 정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정부의 새로운 이주민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하에 저숙련 노동인력에 대해서

15) 고경화, 2006.11, 『국내의 북한이탈주민 - 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고경화국회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

16) 2010년까지 소위 3D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부족은 50만 명 내외로 예상 <2006.2 법무부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계획> 中

17) “한국도 이민을 받아야 한다” 2007년 3월 28일 노무현대통령의 카타르 동포 간담회 내용 中

18) 2006년 5월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 제1회 회의자료 中

는 여전히 사회적 수용과 통합 보다는 적절한 활용과 배제의 입장을 고수, 정주의 대상자인 결혼이민자와 전문 인력(IT 산업을 포함한 고급기술인력)의 한국사회 적응과 사회적 통합에만 초점을 두어 여전히 ‘대상에 따른 차별’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제도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국적 취득 외에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체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주 노동자들은 강제추방으로, 화교 및 결혼이민자들은 출신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 취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리고 법·제도상의 차별을 그대로 둔 채, 복지차원에서의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간이 흐르면 결코 사회통합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법과 제도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내용을 없애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아울러 법과 제도상 차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가는 것이다. 2005년 10월 3주에 걸쳐 일어났던 프랑스 이민자들의 분노폭발은, 제도적으로 차별이 없다하더라도 느껴지는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로의 동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다문화사회로의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있다면 아마 “이주민”과 “다문화”일 것이다. 각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결혼이주민(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을 주인공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대학과 기관들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이 열리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마치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인양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들은 상호이해와 소통이 아니라, 한국화에 다름 아닌 경우가 많다.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이제 막 시작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그 내용을 제대로 채우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실천들이 따라야 할 것이다.

## Die neuen Fremden in Südkorea

### Einwanderer und Saetomin(Flüchtlinge aus Nordkorea)

---

Joeng Gue-Sun, Direktorin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 Migration in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ein neues Phänomen

Das Jahr 1987 stellte einen Wendepunkt nicht nur in der Geschichte der koreanischen Demokratie, sondern auch in der Geschichte der Migrationsarbeit dar. In dieser Zeit ging die Zahl der Koreaner, die das Land verließen, um eine Arbeit zu finden, stark zurück. Stattdessen begannen Migranten anderer Nationen nach Korea einzureisen, um eine Beschäftigung zu finden.

Im Frühjahr 1987, ein Jahr nach den Asienspielen, waren Artikel in Tageszeitungen zu lesen, dass Haushälterinnen philippinischer Herkunft im reichen Wohnviertel Kangnam beschäftigt werden. Das war das erste Anzeichen für die Geburtsstunde der Arbeiter/innen mit Migrationshintergrund in Korea.<sup>1)</sup> Danach begann 1991 offiziell unter dem Namen „Ausländische Praktikanten für die Industrietechnologie (Employ Permit System; Anm. d. Übers.)“ die Zuführung von ausländischen Arbeitskräften, die in den sog.

3D Bereichen (Dirty, Difficult, Dangerous) eingesetzt wurden, in denen die Koreaner selbst nicht tätig sein mochten. Ihre Anzahl stieg stetig, so dass heute, im Jahre 2007, etwa 42 000 Arbeitsmigranten in Korea beschäftigt sind. Die Existenz der Arbeitsmigranten wird einerseits als ein Symbol für den erfolgreichen Wirtschaftswachstum Koreas verstanden, andererseits

---

1) Seol, Dong-Hun, 2003, „Han'guk-úi Oegugin nodongundong, 1993-2003nyón: Ijunodongja-úi chóhang-úi kirok (Die Arbeiterbewegung der Migranten in Korea, 1993-2003: Aufzeichnung des Widerstands von migrantischen Arbeitern), in: Chinbo p'yóngnon, Nr. 17.

werden die Migranten ausschließlich unter dem Aspekt der „Arbeitskraft“ betrachtet und noch nicht als neues Mitglied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akzeptiert.

Das drückt sich vor allem darin aus, indem man lediglich befristete Beschäftigungsmaßnahmen ermöglicht, welche die Niederlassung der Migranten verhindern. Ferner werden im Prozess der Abschiebung von Nicht-Registrierten, deren Anteil fast 50% aller Arbeitsmigranten ausmacht, die Menschenrechte verletzt. Trotz dieser ernsthaften gesellschaftlichen Probleme wird die bestehende Ausweisungspolitik weiter forciert.<sup>2)</sup>

Gleichzeitig wird seit dem Jahr 2000 das Problem der Migration mit einem neuen Aspekt konfrontiert: Ein rapider Anstieg von internationalen Eheschließungen. Im Jahre 1990 betrug die Anzahl an interkulturellen Eheschließungen nur 1,2% der Gesamtzahl, 2006 gar 11,9 % und damit das Zehnfache. Wenn es sich so weiter entwickelt, wird im Jahre 2020 die Anzahl der Kinder dieser Paare etwa 1,67 Mio. betragen und damit ca. 20% der Gesamtbevölkerung ausmachen.

Der schnelle Anstieg der Migrationsquote über die Heirat bringt Probleme der gesellschaftlichen Anpassung und Integration und für die Erziehung der

2) <Tabelle1: Situation der Migranten in Südkorea>Quelle : Justizministerium, 12.2006. Heute (Einheit: Personen, %)

Migranten ( legal + Illegal )	Nach Aufenthaltsstatus*							illegale Migranten
	Arbeitsmigranten			Heiratsmigranten (Migranten vor dem Erwerb der Staatsbürgerschaft)	Koreaner anderer Staatsbürger- schaften	Ausländische Studenten	Anerkannte Flüchtlinge	
	Fachkraft *	Ausgebildete Kräfte*	Arbeitskraft Einfache Funktion					
910,149 (100.0)	24,501 (2.7)	0 (0.0)	296,919 (32.6)	93,786 (10.3)	267,436 (29.4)	30,101 (3.3)	52 (0.1)	21 1,988 (23.3)

\* In der Anzahl der Migranten nach Aufenthaltsstaus sind die unregistrierten Migranten mit eingeschlossen.

\* Die Fachkräfte sind Besitzer einer Urkunde für spezielle Berufe, wie z.B. Professoren, Dozenten für bildende Künste, Forschung, Anleiter für Technik, Organisatoren für Kunstevents etc.

Kinder mit sich. Die Parole „Ein Blut - eine Nation“, die seit der Militärdiktatur als wichtige gesellschaftliche Ideologie fungierte, wird dadurch stark herausgefordert.

Aufgrund dieser gesellschaftlichen Veränderung werden Probleme der chinesischen Migranten in Korea neu reflektiert und beleuchtet, die bislang konsequent nur unter dem Aspekt von „Unverständnissen und Assimilation“ abgetan wurden. Seit Nordkorea eine ernsthafte Hungersnot erlitten hatte, stieg die Zahl der Flüchtlinge aus dem Norden nach Südkorea über das Drittland China stetig an. Bislang wurde die Problematik der Saetomin (nordkoreanische Flüchtlinge) ausschließlich aus politischer Perspektive behandelt. Neuerdings findet eine Annäherung an das Problem aus dem Blickwinkel der Migranten statt. Endlich hat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begonnen, sich neu zu orientieren- nach einem Staat bestehend aus verschiedenen Nationen und ethnischen Gruppen und nach einer Gesellschaft des gemeinsamen Lebens zusammen mit den Migranten. Vor diesem Hintergrund werde ich, ausgehend von den Problemen und der Realität, mit denen die Migranten, insbesondere die Arbeits- und Heiratsmigranten sowie die nordkoreanischen Flüchtlinge, konfrontiert sind, versuchen nach Lösungsansätzen zu schauen.

## **1.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und die Arbeitsmigration**

### **1) Einführung der Arbeitsmigration**

Die koreanische Migrationsgeschichte begann im Dezember 1902, als eine erste Gruppe bestehend aus 121 Koreanern auswanderte, um auf den Zuckerrohrfeldern auf Hawaii in den USA zu arbeiten. Damals siedelten sich einige Koreaner in Mexiko auf Kaffeefarmen an bzw. in der Mandschurei oder auf Sachalin, da sie die Unterdrückung des japanischen Imperialismus seit 1910 nicht mehr aushielten. Heute noch leben diese Koreaner unter den Namen Choseonjok oder Koryojok und versuchen ihre nationale Identität zu wahren. Zwischen den 1960ern und 1970ern entsandte die koreanische Regierung Bergbauarbeiter und Krankenschwestern nach Deutschland,

Soldaten nach Vietnam und Bauarbeiter in den mittleren Osten. Somit stellte Korea ein klassisches Land dar, welches seine Arbeitskräfte exportierte, um im Prozess der Modernisierung ausländische Devisen, insbesondere US-Dollar zu verdienen.

Danach wurde ein Wirtschaftswachstum erzielt, und seit den 1980er Jahren wurde die Arbeitsmigration nicht mehr aktiv forciert, da im Inland ausreichend Arbeitsplätze garantiert wurden und das Lohnniveau gestiegen war (der Arbeiterkampf von 1987 war dafür ausschlaggebend). Ganz im Gegenteil war Korea Ende der 1980er Jahre während der Amtszeit des Präsidenten Roh Tae Woo durch die Forcierung des Projekts „5 Mio. Wohnungsbauten“ mit einem akuten Arbeitskräftemangel konfrontiert. Ferner suchte man auch in den Arbeitsbereichen der so genannten 3 D-Sparte (Dirty, Difficult, Dangerous) händeringend Arbeitskräfte und begann schließlich in der produzierenden Industrie, in Bau- und Fischwirtschaft Arbeitskräfte aus dem Ausland einzuführen.

Nach der Teilung von Nord- und Südkorea war der Verkehr mit den sozialistischen Ländern aufgrund der Unterbrechung der diplomatischen Beziehung eingestellt. Im Falle der chinesischen Koreaner reisten diese mit Touristenvisum bzw. unter dem Vorwand des Verwandtenbesuchs nach Südkorea ein. Sie füllten allmählich mit anderen Arbeitern aus Südostasien die untersten Bereiche auf dem Arbeitsmarkt, welche die Koreaner selbst aufgrund des niedrigen Lohnes und der harten Arbeitsbedingungen immer mehr verlassen hatten. Dabei handelte es sich vor allem um kleine bzw. mittelgroße Unternehmen, Baustellen, Restaurants, Bauernhöfe, Fischereien, Etablissements oder eben um Matrosen für die Hochseefischerei. Südkorea avancierte nach Japan zu einem Traumland der Arbeitsmigration von jungen Menschen aus Südostasien.

Es erfuhr den „Wendepunkt der Migration (migration transition)“, nachdem ab 1990 die Zahl der Arbeitsmigration ins Ausland rapide zurückging, dafür aber in großer Anzahl Arbeitsmigranten eingeführt wurden. Gegenwärtig sollen im Jahre 2007 etwa 420 000 Migranten auf dem Arbeitsmarkt beschäftigt sein. Im Vergleich zu 1991, also seit Beginn der offiziellen

Einführung ausländischer Arbeitskräfte, ist die Zahl der Arbeitsmigranten etwa um das Zehnfache gestiegen.<sup>3)</sup>

## 2) Die Menschenrechtssituation für Migranten

Die Existenz der Arbeitsmigranten symbolisiert das erfolgreiche Wirtschaftswachstum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die seit der japanischen Besetzung und dem Koreakrieg unter weitgehender Zerstörung litt. Tatsächlich

3)

<b>&lt;Tabelle 2: Anzahl der Arbeitsmigranten nach Jahreszahlen und Aufenthaltsstatus&gt;</b>					
Quelle: Justizministerium (Einheit: Person)					
	Insgesamt	Arbeitsvisum	Praktikumsvisum		Unregistrierte Arbeiter (Illegaler Aufenthalt)
			Praktikanten für Betriebsmit Auslandsinvestition	Industriepraktikanten	
1990	21,235	2,833	0	-	18,402
1991	45,449	2,973	599	-	41,877
1992	73,868	3,395	4,945	-	65,528
1993	66,919	3,767	8,644	-	54,508
1994	81,824	5,265	9,512	18,816	48,231
1995	128,906	8,228	15,238	23,574	81,866
1996	210,494	13,420	29,724	38,296	129,054
1997	245,399	15,900	32,656	48,795	148,048
1998	157,689	11,143	15,936	31,073	99,537
1999	217,384	12,592	20,017	49,437	135,338
2000	285,506	19,063	18,504	58,944	188,995
2001	329,555	27,614	13,505	33,230	255,206
2002	357,460	28,560	14,035	25,626	289,239
2003	388,816	200,039	11,826	38,895	138,056
2004	421,641	196,603	8,430	28,125	188,483
2005	345,699	126,617	6,142	32,148	180,792
2006.7.31	401,684	171,976	6,590	35,112	188,006

Anmerkung: Das Ausgangsdatum ist der 31.12. des jeweiligen Jahres.

\* 2003 ging die Anzahl der illegalen Arbeiter stark zurück. Das lag an der Legalisierung der nicht registrierten Arbeitsmigranten unmittelbar nach dem Gesetzeserlass des 'Employ Permit Systems (Gesetze für die Beschäftigung ausländischer Arbeitnehmer etc.)' vom 31.07.2003.

nahm man ihre Existenz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erst wahr, als ihre unmenschlichen Arbeitssituationen und das ernste Ausmaß an Menschenrechtsverletzungen allgemein bekannt wurden.

1994 forderten Arbeitsmigranten, die Unfälle am Arbeitsplatz erlitten, aber weder ausreichende Behandlungen noch angemessene Entschädigungen erhielten, in der Lobby der Bürgerinitiative „Vereinigung für die Durchsetzung von ökonomischer Gerechtigkeit“ eine Unfallentschädigung und demonstrierten dafür. Anschließend zeigten sich im Januar 1995 vor der katholischen Kirche in Myongdong 13 Praktikanten aus Nepal mit den Parolen „Bitte schlagen Sie mich nicht!“ oder „Wir sind keine Sklaven!“. Dadurch wurden die schlimmen Lebenssituationen und Menschenrechtsverletzungen der Arbeitsmigranten bekannt, was einen großen Schock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auslöste. Die Mehrheit der Koreaner glaubte, dass sich seit 1987, also nach dem Kampf für Demokratie und dem großen Arbeiterstreik, die schlimmen Arbeitsbedingungen und die unmenschlichen Arbeitssituationen wesentlich verbessert hätten. Leider waren diese nicht verschwunden, sondern es wurden nur die Menschen ausgetauscht: Statt „koreanischer Arbeiter“ sind es nun Migranten aus Südostasien, die aus armen Verhältnissen stammen.

Die Ursachen für das schlechte Arbeitsumfeld und die Menschenrechtssituation der Arbeitsmigranten können grob in drei Faktoren eingeteilt werden. Erstens: Man war zu sehr von Vorstellungen über die ‚Versorgung mit billigen Arbeitskräften‘ eingenommen, so dass deren Legitimität und ihre Rechte als ‚Arbeiter‘ nicht anerkannt wurden. Problematisch war die Politik für ausländische Arbeitskräfte von der koreanischen Regierung, die eben diese Diskriminierung und die Menschenrechtsverletzungen gegenüber den Arbeitsmigranten zugelassen hatte. Zweitens lag das Problem in der koreanischen Arbeiterbewegung, die es nicht geschafft hatte, über die nationale Zugehörigkeit hinaus mit den Arbeitsmigranten eine Strategie für Solidarität aufzubauen. Letztlich konnte es aus einem bestimmten gesellschaftlichen Bewusstsein heraus geschehen, dass man die Arbeitsmigranten nicht als gleichberechtigte Menschen mit

Kultur und Persönlichkeit betrachtete, sondern sie schnell ignorierte und diskriminierte, weil sie aus Ländern mit einem verhältnismäßig niedrigeren wirtschaftlichen Niveau stammen.

### **3) Das Problem des Systems bezüglich Arbeitskraft migrantischer Herkunft**

Die Politik bezüglich Arbeitskräfte aus dem Ausland, wie sie von der koreanischen Regierung praktiziert wird, lässt eine Anstellung in Industrie- und Beschäftigungsfeldern zu, welche die Koreaner selbst meiden. Das Beschäftigungsprinzip beruht jedoch vor allem auf einer Beschäftigung ohne Zuzug der Familienangehörigen sowie auf einer kurzphasigen Rotationspolitik, die eine Beschäftigungsdauer von bis zu drei Jahren erlaubt.

Insbesondere erkannte man im System zur Einführung ausländischer Arbeitskräfte, dem ‚Industrial Trainee System‘, das seit 1991 praktiziert wurde, die Arbeitsmigranten nicht als Arbeiter an, sondern räumte ihnen nur die Stellung eines Praktikanten ein, der eine Technik erlernt. Dadurch wurde die Anwendung des Arbeitsgesetzes verhindert und zugleich legalisiert, dass die Arbeitsmigranten in Bezug auf Lohn- und Arbeitsbedingungen gegenüber den koreanischen Arbeitern diskriminiert wurden.

Aufgrund seiner inhumanen Aspekte forcierten die Menschenrechtsorganisationen in Südkorea aktiv die Abschaffung des Systems. Nachdem man eine gerichtliche Petition zur Abschaffung des Industrial Trainee Systems, das man als ‚moderne Version der Sklaverei‘ bezeichnete, eingereicht hatte, wurde erst nach acht Jahren das ‚Gesetz für die Beschäftigung ausländischer Arbeitnehmer‘ (Employ Permit System) verabschiedet. Das war im Sommer 2003. Im Januar 2007 wurde schließlich das Industrial Trainee System, das nach der Verabschiedung des Gesetzes parallel praktiziert wurde, ins Employ Permit System integriert und somit nahm sein zähes Leben ein Ende.

Die wichtigsten Neuerungen bei der Einführung des Employ Permit Systems sollten die Abschaffung der Diskriminierung und die Verbesserung der Menschenrechtssituation von Arbeitsmigranten darstellen. Bedauerlicherweise

wurde die tatsächliche Situation der Menschenrechte für die Migranten nicht wesentlich verbessert. Stellvertretend für die Probleme der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nerhalb des *Employ Permit Systems* stehen die folgenden zwei:

**Erstens: Die Menschenrechtsverletzung durch ‚eingeschränkten Wechsel des Arbeitsplatzes‘**

Innerhalb des *Employ Permit Systems* ist „ein Wechsel des Arbeitsplatzes von ausländischen Arbeitnehmern“ bis zu dreimal pro Jahr (wenn es sich nicht um Anschuldigungen für Arbeitsmigranten handelt, ist ein weiteres Mal zusätzlich erlaubt) zugelassen. Dies gilt im Falle, dass keine weiteren Arbeitsverhältnisse aufrecht erhalten werden können, z.B. wegen Auflösung des Arbeitsvertrages durch den Arbeitgeber, wegen Schließung bzw. Geschäftsaufgabe, wegen Menschenrechtsverletzungen wie etwa Gewaltausübung, wegen Lohninbehaltung oder Minderung der Arbeitsbedingungen.

Die ausländischen Arbeitnehmer sind unbedingt dazu verpflichtet, das Zentrum für stabile Beschäftigung (*Goyonganjeong Center*) zu besuchen, um Arbeit vermittelt zu bekommen. Jedoch ist es fast unmöglich, die Probleme des Arbeitsumfelds bzw. der Inhalte der Beschäftigung zu thematisieren, oder auch die Konflikte mit den koreanischen Mitarbeitern aufgrund deren Verhalten und alltäglicher sprachlicher Gewalt, worüber die Mehrheit der Arbeitsmigranten klagt<sup>4)</sup>.

---

4) Die Gruppe der gemeinnützigen Rechtsanwälte der *Arumdaun* Stiftung äußerte hierzu folgende Meinung: 'Muss man für das Ziel den Schutz der Beschäftigungschancen von inländischen Arbeitnehmern zu stärken, den Arbeitsplatzwechsel der Arbeitsmigranten prinzipiell einschränken?'

Das *Employ Permit System* als Antwort auf diese Frage und auch das Einverständnis mit diesem System sind als Ausdruck von Gewalt zu verstehen, gemäß der Denkweise 'Mittel zum Zweck'. Ein Vertrag, insbesondere ein Arbeitsvertrag muss unter der Voraussetzung einer freien und rationalen Meinungsentscheidung der gleichberechtigten Betroffenen zustande kommen. Durch die Einschränkung des Arbeitsplatzwechsels steht der einseitig Betroffene des Arbeitsvertrags tatsächlich in einem Verhältnis von Abhängigkeit. Es ist wie ein Befehl, die alltäglichen Diskriminierungen, die durch die klare Regelung des *Employ Permit Systems* nicht ausgesiebt werden können, zu dulden, oder wie ein gruseliger Zwang einer gesellschaftlichen Todesstrafe, dass man das Land verlassen oder aus dem System

Die nicht regulären Arbeitsmigranten müssen jedes Jahr ihren Arbeitsvertrag erneut verlängern. Sie befürchten am meisten, dass sie gar nicht die drei Jahre arbeiten können, die schon kurz genug sind, sondern in ihr Heimatland zurückgeschickt werden. Hatten sie doch unglaublich hohe Kosten investiert, um nach Korea zu kommen. Deshalb ertragen sie schweigend die Ungerechtigkeiten auf dem Arbeitsplatz oder hauen ab, wenn sie keinen Weg für eine angemessene Alternative finden, weswegen sie schließlich als illegale Arbeitsmigranten untertauchen müssen: (Siehe die illegalen Arbeitsmigranten in <Tabelle 1: die Situation für die Migranten in Korea>)

### **Zweitens: Die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extreme Kontrolle und Abschiebung von illegalen Arbeitsmigranten**

Die koreanische Regierung setzt zur Lösung des Problems von illegalen Arbeitsmigranten auf extreme Kontrollen und Abschiebung'. Die Migranten fühlen sich insbesondere durch die übertriebenen, leistungsbezogenen Kontrollen bedroht. Diese werden derart forciert, dass viele um ihr Leben fürchten und versuchen zu fliehen. Denn es passieren zahlreiche Unfälle, wie z.B. Bein- und Knochenbrüche. Und die Menschenrechtsverletzungen bezüglich der Arbeitsmigranten lassen zunehmend öffentliche Kritik aufkommen.

Individuell wirken sich Zwangskontrollen und die Abschiebung, wie sie

---

ausgestoßen wird, wenn man den Arbeitsplatz verlassen möchte. Genau das sind die gewaltsamen Grundlagen für den funktionierenden Mechanismus des *Employ Permit Systems*; eine Messerschneide, die sich auf der anderen Seite der formal gleichberechtigten und neutralen Gesetzesvorschrift und des Arbeitsvertrages befindet.

Die prinzipielle Einschränkung des Arbeitsplatzwechsels liegt im Toten Winkel der Menschenrechtsverletzung, der durch das *Employ Permit System* nicht geregelt wird bzw. nicht geregelt werden kann. Schließlich fördert es die illegalen Aufenthalte und die dauerhafte Ausnutzung von Arbeitsmigranten am Arbeitsplatz, da sie in Abhängigkeitsverhältnissen mit niedrigem Lohn stehen, wodurch die Verzerrung des Arbeitsmarktes entsteht. Die prinzipielle Einschränkung des Arbeitsplatzwechsels ist weder alternatives Mittel zum Zweck für den Beschäftigungsschutz für Koreaner noch ein geeignetes Instrument für die Verwirklichung des Zieles..."

(Aus: *Öffentliche Meinung*, Garantie für den freien Arbeitsplatzwechsel als "Prinzip" / Gruppe der gemeinnützigen Rechtsanwälte der Arúndaun Stiftung)

seit der Verabschiedung des Employ Permit Systems durchgeführt wird, bei den illegalen Arbeitsmigranten verheerend aus: So hielt Herr Daraka aus Sri Lanka die Angst vor der Zwangskontrolle nicht mehr aus und brachte sich selbst um. Herr Riton aus Nepal, der chinesisch stämmige Koreaner Herr Kim Wonseop, und weitere 10 Arbeitsmigranten verloren aus demselben Grund das Leben. Im Februar 2006 stürzte sich ein türkischer Arbeitsmigrant aus Furcht vor Zwangsabschiebung aus dem Büro der Kontrollbehörde für Migration in den Tod. Im April desselben Jahres ereignete sich ebenfalls im Laufe der übertriebenen Verfolgung seitens der Kontrollbehörde ein tödlicher Sturz eines Arbeitsmigranten aus Indonesien. Im Februar 2007 kamen elf Arbeitsmigranten bei einem Brand der Wachstation für Ausländer ums Leben, wo sie auf ihre Abschiebung warteten; und dergleichen mehr.

Die Tatsache, dass die Menschenrechtsverletzungen nicht nur durch die Unternehmen verübt werden, sondern auch auf der Regierungsebene stattfinden, ist extrem bedauerlich.<sup>5)</sup>

#### **4) Gewerkschaft der Arbeitsmigranten und die Solidarität**

Im Falle Deutschlands wurden in jener Industrialisierungsphase, die man als ‚Wunder am Rhein‘ bezeichnet, auf Initiative von Großunternehmen und Industriefabrikanten ausländische Arbeitskräfte dem Prozess der Massenproduktion zugeführt. Um ein Absinken der Arbeitsbedingungen inländischer Arbeitnehmer zu vermeiden, brachten sich die Gewerkschaften bezüglich der Verbesserung der Arbeitsbedingungen und Organisation der Arbeitsmigranten aktiv mit ein. Im Falle Südkoreas hingegen wurden ausländische Arbeitskräfte von solchen Unternehmen beschäftigt, die überwiegend in der Technologieentwicklung bzw. Technisierung tätig waren

---

5) Beispiele für Menschenrechtsverletzungen unterschiedlichster Art gegen illegale Arbeitsmigranten wurden aus der 'Midungnok oegu in tansok mit oegu in bohoshisól shiltaejosa (Untersuchung über die Lage der Kontrollen gegenüber illegalen Arbeitsmigranten und der Schutzeinrichtungen für Ausländer) im Kapitel 3, Absatz 2: Probleme bei Kontroll- und Schutzvorgängen im Forschungsbericht über die Untersuchung der Menschenrechtssituation aus dem Jahr 2005 durch die Kukka in'gwon wiwonhoe (Die staatliche Kommission für Menschenrechte) und aus dem Bericht 'Menschenrechte für Arbeitsmigranten. Vorschläge zur Garantie der Arbeitsrechte und zur Verbesserung des Systems für ausländische Arbeitskräfte', die im Mai 2006 von der Organisation 'Menschrechtssolidarität für Arbeitsmigranten' beim Justizministerium eingereicht wurden, zusammengestellt.

und sich in einer Vorstufe zur Expansion ins Ausland befanden. Oder von ärmeren Unternehmen, die kein besonders hohes Niveau erreichen konnten.

Dadurch entstanden kaum Interessenkonflikte zwischen Arbeitsmigranten und inländischen Arbeitern, vor allem nicht mit den regulären Arbeitskräften der Großkonzerne. Folglich nahmen die Arbeitsmigranten, unterstützt durch die passive Haltung bzw. Nichteinmischung der Gewerkschaften, die unterste Schicht des Arbeitsmarkts ein. Sie wurden vom Schutz der Arbeitsrechte und von gewerkschaftlicher Organisation ausgeschlossen.

Dagegen waren es Kirchengruppen und Bürgerorganisationen, die sich als erstes für die Arbeitsmigranten und ihre benachteiligte Stellung interessierten. Im Jahre 2006 gibt es nahezu 145 Organisationen, die aktiv die Arbeitsmigranten unterstützen.<sup>6)</sup> Sie haben sich grundlegend für den Schutz der Menschenrechte eingesetzt, die schwierige Lage der Migranten und die strukturellen Schwachstellen in Bezug zu gesellschaftlichen Problematiken hervorgehoben. Und sie haben, als eine ihrer wichtigsten Leistungen, eingefordert, dass betreffende Maßnahmen auf Regierungsebene geschaffen werden. Mit Hilfe der Kirchen- und Bürgerorganisationen konnten die Arbeitsmigranten länderspezifische Gemeinschaften gründen und einen vielfältigen Austausch organisieren. Dabei tauschen sie nicht nur Informationen untereinander aus und organisieren Kulturveranstaltungen, sondern sie beteiligen sich auch aktiv an der Verbesserung relevanter Institutionen.

Im Jahre 2002 wurde in Korea die erste Gewerkschaft für Arbeitsmigranten überhaupt gegründet, die „Zweigstelle für Migration von der Gewerkschaft für Gleichheit im Gebiet Seoul und Incheon“. Da die Mehrheit der Mitglieder

---

6) Sól, Tong-hun u. Yi, Ran-ju (2006), 'Oegugin kúllojajiwon saópgigwan chedogaesón mit chungjanggi gyehoeksurip-ul wihan yón'gu (Forschung über die Strukturverbesserung der Unternehmen (Institutionen) für die Unterstützung der Arbeitsmigranten bzw. die Konstituierung von mittel- und langfristiger Planung)', Kúllo bokjigongdan yón'gu yongyókbogósó (Forschungsberichte über den 'Arbeitswohlfahrt-Industriekomplex').

illegale Arbeitsmigranten waren, sind ihre Aktivitäten allerdings stark eingeschränkt gewesen. Im November 2003 wurde dann nach einer langen Demonstration von mehr als dreißig Tagen gegen die Zwangsabschiebung von illegalen Arbeitsmigranten, die eigenständige „Gewerkschaft der Arbeitsmigranten im Raum Seoul, Incheon und Kyonggi-Provinz“ gegründet. Das Arbeitsministerium lehnte zunächst deren Anmeldung mit der Begründung ab, dass sich die Mehrheit der Mitglieder im Lande aufhalte. Jedoch urteilte im Februar 2002 das Hohe Gericht von Seoul, dass diese Ablehnung der Gewerkschaftsgründung zurückzunehmen ist. So wird erwartet, dass Gewerkschaftsaktivitäten von Seiten der Arbeitsmigranten in Zukunft weiter zunehmen werden.

## **2.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und die Heiratsmigranten**

### **1) Die Situation der Heiratsmigran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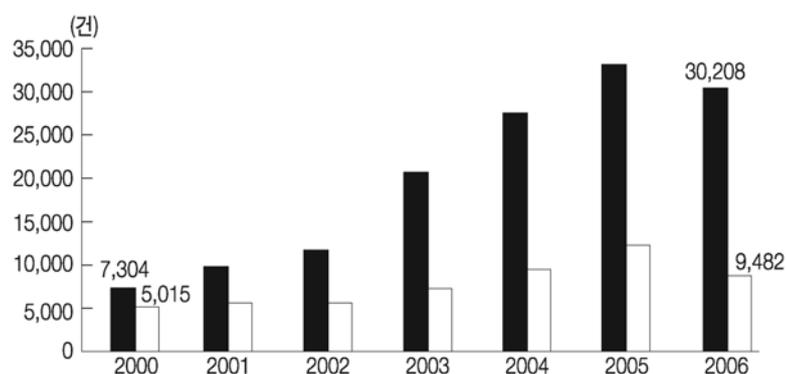
Laut der kürzlich veröffentlichten Ergebnisse des Statistischen Amtes schlossen im Jahr 2006 zwölf von einhundert Paaren in Korea eine internationale Ehe (39 690 von 332 752 Eheschließungen, also 11,9 %). Im Vergleich zu den 13,6% aus dem Jahr 2005 ist die Tendenz zwar ein wenig rückläufig. Bedenkt man jedoch, dass im Jahre 1980 nur eines von 100 Paaren bilateral geheiratet hat, zeigt sich insgesamt ein gewaltiger Aufwärtstrend. Auf Grund der Einführung von Arbeitsmigranten nach Korea gibt es einen besonders hohen Anstieg von Ehen zwischen Koreanerinnen und Arbeitsmigranten. Die Zahl bilateraler Eheschließungen ging ab 2000 rasch nach oben; in 70% dieser Fälle vermittelten Heiratsagenturen Ehen zwischen Koreanern und Migrantinnen. Allerdings nahm die Scheidungsrate der bilateralen Eheschließungen im vergangenen Jahr stark zu (46,8%), gegenläufig zum Rückgang der gesamten Scheidungsfälle. Dies veranschaulicht, dass das Leben der Migrantinnen anscheinend nicht problemlos verläuft.

<Tabelle 3> Fälle der bilateralen Eheschließungen und ihr Anteil

(Quelle: Statistisches Amt /Fall, %)

Jahr	Gesamtzahl der Eheschließungen	Bilaterale Eheschließung	Ausländische Ehefrauen	Ausländische Ehemänner
1990	399 312	4710(1,2)	619(0,2)	4091(1,0)
1995	398 484	13494(3,4)	10365(2,6)	3129(0,8)
2000	334 030	12 319(3,7)	7 304(2,2)	2015(1,5)
2001	320 063	15 234(4,8)	10 006(3,1)	5228(1,6)
2002	306 573	15 913(5,2)	11 107(3,6)	4896(1,6)
2003	304 932	25 658(8,4)	19 214(6,3)	6444(2,1)
2004	310 944	35 447(11,4)	25 594(8,2)	9853(3,2)
2005	316 375	43 121(13,6)	31 180(9,9)	11941(3,8)
2006	332 752	39 690(11,9)	30 208(9,0)	9482(2,8)
1990-2005	2 690 713	16 5257 ( 4,1)	178 299 (2,7)	45 369 (1,4)

<Tabelle 6> Entwicklung der bilateralen Eheschließungen



Dunkle Säule: Koreaner + Ausländerinnen; helle Säule: Koreanerinnen + Ausländ

<Tabelle 4> Herkunftsländer der Heiratsmigrantinnen im Jahr 2006

(Quelle: Justizministerium / Fall, %)

Herkunftsland	Anzahl	Herkunftsland	Anzahl
China	14 608 (48,4)	Kambodscha	394 (1,3)
Vietnam	10 131 (33,5)	USA	334 (1,1)
Japan	1 484 (4,9)	Usbekistan	314(1,0)
Philippinen	1 157(3,8)	Sonstiges*	1 192 (3,9)
Mongolei	594 (2,0)	Insgesamt	30 208 (100,0)

\*Sonstiges: GUS, Osteuropa, Entwicklungsländer in Asien, Afrika, Mittel- und Südamerika und einschließlich der Industrieländer.

Als Ursachen für den rapiden Anstieg von bilateralen Eheschließungen in Südkorea in jüngster Zeit lassen sich im Groben drei Faktoren finden.

Erstens: Etwa 90% der Herkunftsländer der Heiratsmigrantinnen sind asiatische Länder. Sie weisen im Verhältnis zu Korea ein wirtschaftlich niedrigeres Niveau auf, so dass die Grundursache für die Migration wohl die Armut darstellt. Die Kosten für eine bilaterale Heirat sind wesentlich günstiger, als die internationale Stellensuche, weshalb in den ärmeren Ländern besonders junge Frauen aus der Schicht mit geringen Einkommen zu Heiratsmigrantinnen werden<sup>7)</sup>.

Zweitens: Innerhalb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verstärkt sich auf dem Heiratsmarkt aufgrund der Bevorzugung von Jungen seit Jahrzehnten das Ungleichgewicht in Bezug auf den Geschlechteranteil. Durch das tendenziell hohe Bildungsniveau in der Gesamtgesellschaft und den Anstieg der Beteiligung von Frauen am wirtschaftlichen Leben, steigt zudem das Heiratsalter an. Auffallend ist das Phänomen des zunehmenden Heiratsalters. Auch steigt der Anteil der Ledigen an.

Drittens: Es sind die Heiratsvermittlungsagenturen, die entsprechende Phänomene zu nutzen wissen. Als die Heirat zwischen Koreaner/innen selbst schwierig wurde, begannen Heiratsagenturen wie Pilze aus dem Boden zu sprießen. Seitdem floriert das Geschäft mit der Vermittlung ausländischer Heiratskandidaten.

Obwohl die bilaterale Heirat in den letzten Jahren rapide zugenommen hat, hinkt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was Gesetze, Institutionen und Bewusstsein den Heiratsmigranten gegenüber betrifft, noch hinterher. In der Folge werden besonders die Frauen, die bei den Heiratsmigranten die absolute Mehrheit ausmachen, in Korea gleich doppelt diskriminiert: als

---

7) Seol, Dong-hun u.a. 2005. Kukje kyorhon ijuyósóng shiltaejosa mit pogón, pokjjiwon jóngch'aekbangan (Die Untersuchung der Lage von Migrantinnen in bilateralen Ehen und politische Maßnahmen für die Unterstützung der Gesundheits- und sozialen Absicherung), Bericht des Forschungsdienstes von der Gesundheits- und Wohlfahrtsabteilung, S. 8.

Ausländerinnen und als Frauen. Auch die Kinder leiden unter fortgesetzter Diskriminierung. So ist die gesamte Familie in der Regel weit von einem glücklichen Leben entfernt. Wenn die gesellschaftliche Integration von Heiratsmigranten nicht gelingen sollte, wird sich dies mit der Zeit zu einem Konfliktfaktor und zu einer großen Belastung für die Gesellschaft entwickeln. Dieses Problem muss daher besonders genau beobachtet werden.

## **2) Menschenrechte für Heiratsmigranten**

Das größte Leid und die größte Schwierigkeit bedeutet für Heiratsmigranten die Tatsache, dass der Prozess der Assimilation in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ziemlich unmenschlich und gewalttätig verläuft. Die grundlegenden Schwierigkeiten seien durch folgende drei Beispiele gekennzeichnet.

Erstens: institutionelle Probleme

Nach der Heirat sehen sich ausländische Partner mit der Unsicherheit ihres Status konfrontiert. Dies ist für sie einer der wesentlichsten Gründe zur Beunruhigung. Nach jetziger Gesetzesgrundlage gehen den ausländischen Partnern die Aufenthaltsberechtigungen verloren, wenn sie sich scheiden lassen, bevor sie die Staatsbürgerschaft erhalten haben. Dadurch müssen immer wieder zahlreiche Migrantinnen diverse Menschenrechtsverletzungen ertragen. Manche haben in Folge dessen sogar ihr kostbares Leben verloren. Die meisten gesetzlichen und institutionellen Benachteiligungen, mit denen die ausländischen Partner konfrontiert werden, entstehen durch die Mindestaufenthaltsdauer. Alle Frauen und Männer, die mit koreanischen Staatsbürger/innen verheiratet sind, müssen bestimmte Bedingungen erfüllen, um von dem Justizminister die Erlaubnis für die Einbürgerung zu erhalten. Hierzu zählt, dass sie seit mindestens zwei Jahren im Lande leben. Nur dann können sie die koreanische Staatsbürgerschaft erwerben. Diese Regelung gilt zwar in so weit als fortschrittlich, als dass das Prinzip der Gleichheit zwischen Frau und Mann gewahrt wird und das Gesetz für die Staatsbürgerschaft nicht auf der männlichen Linie des Stammbaumes beruht.

Jedoch bewirkt die Fristregelung von über zwei Jahren, womit angeblich den Scheinehen vorgebeugt werden soll, dass koreanische Männer dazu

verleitet werden, ihre ausländischen Partnerinnen auf Grund ihres unsicheren Status und ihrer Schwäche auszunutzen und sie zu beherrschen.<sup>8)</sup> Hierin spiegelt sich auch, dass die bilateralen Eheschließungen zwischen koreanischen Männern und Frauen aus ärmeren asiatischen Ländern, welche in jüngster Zeit rapide zu nehmen, eher den Charakter eines Heiratshandels tragen. Außerdem hält die Politik unter dem Vorwand des Staatsschutzes ein System aufrecht, welches die Arbeitsmigranten asiatischer Herkunft diskriminiert. Ferner gibt es ein gewisses Überlegenheitsgefühl auf Seiten der koreanischen Bürger. Voreingenommenheit und Vorurteile gegenüber den People of Colors sowie das Gefangensein in Phantasmen bezüglich der Blutreinheit finden sich miteinander gekoppelt. Ein fataler, nahezu selbstzerstörerischer Charakterzug.

### **3) Realität der Probleme der Neusiedler bei der Eingliederung in Südkorea**

Für nordkoreanische Bürger bedeutet die Flucht ein höchst gefährliches Abenteuer, bei dem sie ihr Leben aufs Spiel setzen. Außerdem leiden sie nach der Flucht in Ländern wie in China auf Grund ihres illegalen Aufenthaltsstatus stets an Furcht vor Verhaftung und Abschiebung, wie auch an Hunger und Kälte. So fristen sie oft ein Leben als Vagabund. Unter diesen Umständen haben Menschenrechtsverletzungen und Menschenhandel besonders bei nordkoreanischen Frauen einen ernsthaften Grad erreicht. Die Probleme bezüglich der Menschenrechte haben für die Nordkoreaner/innen in China, wo ihre Zahl auf etwa 10.000 geschätzt wird, ein extremes Maß

---

8) Seit April 2004 hat sich die Regelung geändert. Selbst wenn man sich scheiden lässt, kann man die Staatsbürgerschaft beantragen, falls dem koreanischen Ehepartner gegenüber eine Anschuldigung vorliegt bzw. die Erziehung von den Kindern aus der Ehe mit einem koreanischen Ehegatten übernommen wird. Trotz der Verbesserung des Gesetzes war es für die Migrantinnen, die sich nicht verständigen konnten und sich in den institutionellen Systemen von Korea nicht auskannten, fast unmöglich, die Bezeichnungsgünde für ihre Ehepartner klar zu stellen und den Antrag für die Einbürgerung einzureichen. In diesem Zusammenhang wurde der Aspekt berücksichtigt, dass es für die Migrantinnen, die sich nicht gut verständigen können und mit den Vorgängen der koreanischen Gesetze nicht vertraut sind, schwierig ist, Information darüber zu sammeln, d.h., es wird auch eine Bestätigung, die von einer staatlich anerkannten Frauenorganisation erstellt wird, als Beweisunterlage für Anschuldigungsgünde anerkannt. Diese Revision der Richtlinien für die Bearbeitung der Staatsbürgerschaft durch das Justizministerium wurde im Mai 2006 erlassen und gilt als mutig.

angenommen. Nach der Einreise in Südkorea sind die Flüchtlinge zwar nicht mehr solchen Gefahren ausgesetzt, jedoch stellt ihr Prozess zur Integration in die südkoreanische Gesellschaft keineswegs ein einfaches Unterfangen dar.

### **Erstens: Kulturelle Fremdheit und gesellschaftliche Differenz**

Das größte Problem bei der Niederlassung in Südkorea liegt in der Identitätsverwirrung, die durch kulturelle Fremdheit und gegensätzliche gesellschaftliche Strukturen verursacht wird. Insbesondere bei den Jugendlichen, die etwa 20% der gesamten Neusiedler ausmachen, erreicht der Anteil derjenigen ohne Schulabschluss 90%. Denn sie konnten nach der Flucht und vor der Einreise nach Südkorea keine Ausbildung erhalten. Dadurch ergeben sich nach ihrer Ankunft in Südkorea große Probleme, unter anderem bei der Einschulung in eine reguläre Schule wie auch bei der Eingewöhnung in der südkoreanischen Gesellschaft<sup>9)</sup>.

### **Zweitens: Gesellschaftliche Vorurteile**

Es gibt besondere Schwierigkeiten bei der Eingewöhnung aufgrund kultureller Differenzen vor allem bei der Sprache, den Wertvorstellungen, den Denkstrukturen, den gesellschaftlichen Strukturen etc. Jedoch erweist sich als weitere Ursache von Problemen, dass auf Seiten der Südkoreaner Vorurteile gegenüber den Neusiedlern bestehen und dass ihre negative Haltung das Gesellschafts- und Berufsleben der Neusiedler erschwert. Die Mehrheit der Neusiedler ohne verwandtschaftliche Beziehungen wird von kirchlichen Organisationen materiell und seelsorgerisch unterstützt, wodurch ihre religiösen Aktivitäten auch in Südkorea relativ lebhaft sind. Jedoch können sie außerhalb der Kirchen kaum gesellschaftliche Beziehungen entwickeln und leben isoliert außerhalb der Gesellschaft, so dass die Neusiedler letzten Endes unter sich bleiben.

---

9) Im, Hyeong-jin, 8. 2006. 'Saetómin ch'óngsonyón-úi hyónshil-kwa kajokhaech'e munje haegyólbangan (Die Situation der Jugendlichen bei Neusiedlern und die Lösungsmaßnahmen für die Probleme der Auflösung von Familien)", in: Saetómin kajok-úi han'guksahoejóngch'ak chiwon-úl wihan ch'óngch'aekgandamhoe (Beratungsgespräch zur Unterstützung für die Eingliederung der Neusiedlerfamilien in die südkoreanischen Gesellschaft), Materialsammlung, S. 89.

### **Drittens: Finanzielle Schwierigkeiten**

Gegenwärtig leidet die Mehrheit der Neusiedler unter finanzieller Not. Dies ist sehr bedeutend im Bezug auf ihre Niederlassung. Zunächst werden ihnen Startgelder, dann eine Prämie für die Niederlassung, die Bürgschaft für Miete sowie verschiedene Unterstützungsgelder und Sach- und Geldmittel für den Lebensunterhalt ausgezahlt. Ein solches Unterstützungssystem mit Schwerpunkt in der Beihilfe, vermag jedoch den Neusiedlern kaum zu einem eigenständigen Leben zu verhelfen. Etwa 30-40% der Neusiedler im erwerbsfähigen Alter sind arbeitslos. Selbst unter Berufstätigen befinden sich die meisten in einem irregulären Arbeitsverhältnis oder im privaten Dienstleistungsbereich. Daher sind Neusiedler durch hohe Arbeitslosigkeit oder niedriges Einkommen auf die Beihilfe zum Lebensunterhalt der Regierung angewiesen.

### **Viertens: Gesundheitliche Probleme**

Viele Neusiedler haben während ihrer Flucht aus Nordkorea und den langen illegalen Aufenthalten in China und anderen Drittländern bis zur Einreise nach Südkorea große körperliche oder seelische Verletzungen erlitten, wie z.B. Hunger, Menschenhandel, Gewalt, Verhaftung oder Folter während der Zwangsabschiebung. Im schlimmeren gesundheitlichen Zustand reisen sie nach Südkorea ein und leiden weiterhin unter Ausschluss und unter Komplexen wegen kultureller und gesellschaftlicher Konflikte und Anpassungsproblemen. Auf Grund dieses gesundheitlichen Allgemeinzustands der Neusiedler liegt im Vergleich zur südkoreanischen Bevölkerung die Zahl der chronischen Erkrankungen und diversen Krankheiten wesentlich höher. Dieser schlechte Gesundheitszustand erschwert es, Anstellungen zu finden und ein normales gesellschaftliches Leben zu führen<sup>10)</sup>.

Folglich ist es notwendig, für die Neusiedler ein spezielleres Beratungsprogramm unmittelbar nach der Einreise nach Südkorea einzuführen.

---

10) Go, Gyeong-hoa, 11.2006. 'Kungnaeoe pukhanitaljumin chiwonsaóp-úi munje-wa kaesónbanghyang', aus: Go Gyeong-hoa kukhoeúiwon kukjónggamsa chóngh'aekjaryojip chung (Materialsammlung für politische Maßnahmen des Abgeordneten Go Gyeong-hoa, Aufsichtsrat der Staatsverwaltung).

Ebenfalls werden systematischere Maßnahmen für die Unterstützung gefordert, unter anderem Beratungen bezüglich Menschenrechte und eine stabile Integration in die südkoreanische Gesellschaft.

### 3. Für ein Leben miteinander

Ende 2006 leben mehr als 91 000 Migranten/innen in Südkorea. Es wurde weltweit die niedrigste Geburtenrate (von 1,08 im Jahre 2005) verzeichnet. Südkorea ist somit eine Gesellschaft mit niedriger Geburtsrate und hohem Sterbealter. Diese Situation erfordert, dass stets eine bestimmte Größe von ausländischen Arbeitskräften notwendig sein wird.<sup>11)</sup> In diesem Jahr sind es 16 Jahre seit der offiziellen Zulassung von Arbeitsmigranten. Inzwischen hat sich der Begriff ‚Migranten‘ in der südkoreanischen Gesellschaft als selbstverständlich eingebürgert und es wird zaghaft von einem Wandel zu einer ‚Einwanderungsgesellschaft‘ gesprochen<sup>12)</sup>.

Die Regierung Südkoreas gab im Mai 2006 mit dem Slogan ‚Offene Gesellschaft für ein gemeinsames Leben mit Ausländern‘ eine neue Ausländerpolitik kund, um die Menschenrechte und die gesellschaftliche Integration zu verstärken.<sup>13)</sup> Sie leitete am 27. April 2007 den Gesetzgebungsprozess für das <Grundgesetz über die Behandlung von Ausländern in Südkorea> ein und schuf die Verwaltungseinrichtung für Migration. Jedoch beharrt die neue Migrationspolitik der Regierung unter dem Vorwand der „Stärkung zur Wettbewerbsfähigkeit des Staates“ gegenüber den unausgebildeten Arbeitskräften auf ihrer Haltung für eine ausreichende Nutzung und gleichzeitiger Ausschließung und bemüht sich weniger um die

---

11) Bis 2010 wird der Mangel an Arbeitskräften in sog. Bereichen 3D und Arbeitsplätzen in kleinen Betriebsgrößen etwa auf um die 50 000 Arbeiter geschätzt. Aus: 2006.2 Pómmubu ch'uripgukkwallihaengjóng pyónhwajóllyakkyehoeok. (2006.2. Strategieplan für eine Veränderung in der Verwaltung für Einreisekontrolle im Justizministerium, 2006.2).

12) 'Südkorea muss auch die Migration aufnehmen.', aus: der Rede von Präsidenten Roh Mu Hyon bei dem Gespräch mit den Auslandskoreanern in Katar am 28.03.2007.

13) Kungmunch'ongnishil sanha 'Oeguginjóngch'aekwiwonhoe" che 1 hoe hoeújaryo (Aus den Unterlagen der 1. Konferenz von 'Kommission für Ausländerpolitik', unterstellt dem Staatssekretär am 26. Mai 2006.)

gesellschaftliche Aufnahme und die Integration. Ihr Fokus liegt auf der Assimilation und Integration von Heiratsmigranten und auf einer dauerhaften Aufenthaltsmöglichkeit von Spezialisten (Arbeitskräfte im Bereich der hohen Technologie einschließlich der IT Industrie). Damit ist die neue Migrationspolitik inhaltlich immer noch von diskriminierender Prägung, da die Maßnahmen je nach Betroffenen unterschiedlich gehandhabt werden.

Allerdings ist es für ein gemeinsames Leben mit Migranten elementar, dass es für sie keine institutionelle Diskriminierung gibt, nur weil sie Ausländer sind. Es gibt auf der institutionellen Ebene für einen sicheren Aufenthalt in Südkorea außer des Erwerbs einer Staatsbürgerschaft noch keine andere Möglichkeit. Dies hat dazu geführt, dass die Würde von Menschen verletzt wurde, indem Arbeitsmigranten zwangsweise abgeschoben wurden, oder Auslandschinesen und Heiratsmigranten sich gezwungen sehen, ihre jeweilige Staatsbürgerschaft zugunsten der koreanischen aufzugeben. Die Differenzen werden sich weiter verhärten, wenn man über Unterstützungen auf Ebene der sozialen Wohlfahrt diskutiert, während man die diskriminierenden juristischen Strukturen belässt. In naher Zukunft kann gewiss keine gesellschaftliche Integration erwartet werden. Entsprechend sollten die diskriminierenden Inhalte gegenüber den Migranten in den Gesetzgebungen und den institutionellen Einrichtungen, wie sie überall in der Gesellschaft präsent sind, schleunigst beseitigt werden.

Gleichzeitig ist es darüber hinaus überaus wichtig, das gesellschaftliche Bewusstsein zu verändern. Hier müssen die Diskriminierungen und Vorurteile gegenüber Ausländern in aller Öffentlichkeit erkannt werden. Die emotionalen Eruptionen der französischen Migranten, die im Oktober 2005 über drei Wochen lang angehalten haben, zeigen deutlich, wie gefühlte Diskriminierungen ernsthafte gesellschaftliche Probleme darstellen, selbst ohne institutionelle Diskriminierungen. Es ist ungemein wichtig, die eigene Identität zu bewahren und sich um die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und für ein gemeinsames Leben zu bemühen, anstatt von den Ausländern einseitige Assimilation in die koreanische Kultur zu verlangen.

Unter den Wörtern, die im letzten Jahr in Südkorea am häufigsten gebraucht wurden, befinden sich sicherlich die beiden Begriffe „Migranten“ und „Multikultur“. Jedes Medienunternehmen produziert ein konkurrierendes Programm, worin Heiratsmigranten (insbesondere die weiblichen) als Hauptfiguren vorkommen. In den einzelnen Universitäten und Institutionen finden Symposien mit dem Themenschwerpunkt ‚Multikultur‘ statt. Das hat nach außen hin den Anschein, als sei die südkoreanische Gesellschaft eine multikulturelle. Jedoch geht es in den meisten Fällen nicht tatsächlich inhaltlich um gegenseitiges Verständnis und Kommunikation, sondern vielmehr um „Verkoreanisierung“. Die gesellschaftliche Diskussion über ‚Multikultur‘ und dem gemeinsamen Leben mit Migranten hat eben erst begonnen. Sie müssen in Zukunft inhaltlich richtig ausgefüllt und noch zahlreicher umgesetzt werden.

#### ***Zweitens: Probleme durch die Heiratsvermittlungsunternehmen***

Am rapiden Anstieg der internationalen Eheschließung hatten die Vermittlungsagenturen mit ihrem Engagement großen Anteil. Sie vermehrten sich schnell, da man es verstand, diese Heiraten auf besondere Weise kommerziell zu nutzen. Sie ermöglichten, dass die Migrantinnen einreisen konnten, aber oft wurden deren Leben durch ihre Lügen zerstört. Grundsätzlich haben derart vermittelte Heiraten den Charakter eines regelrechten Handels. Und es hat sich gezeigt, dass derartige Elemente des Menschenhandels bis auf diplomatischer Ebene Besorgnis erregt haben.<sup>14)</sup> In der Regel bezahlt der koreanische Ehemann dem Vermittlungsbüro für die

---

14) Am 21. April diesen Jahres wurden in einem Artikel der Tageszeitung 'Choseon Ilbo' mit dem Titel 'Jungfrauen aus Vietnam, ab nach Korea, in das Land der Hoffnung!' die koreanischen Männer als 'Prinzen' und die vietnamesische Frauen als 'Frauen, die auf die Wahl des Prinzen warten' dargestellt. Die darauf hin aufflammende Kritik bemängelte, dass das Niveau dieses Artikels einer Werbung für Agenturen für Heiratsvermittlung gleich käme, da hier die vietnamesischen Frauen wie Waren angeboten werden. Die Tatsache, dass eine Tageszeitung eines Landes über Frauen eines anderen Landes so offensiv anmaßend geschrieben hat, erregte starke Wut und Proteste. Nicht nur reagierten Vietnamesinnen in Korea mit heftiger Kritik, sondern auch die Vorsitzende des Dachverbandes von Frauenorganisationen in Vietnam und der frühere Staatssekretär der vietnamesischen Regierung äußerten öffentlich ihre Bestürzung.

Heirat zwischen 8 000 € und 12 000 €. Deshalb behandeln die Mehrheit der Männer und auch ihre Familien die Frauen wie Produkte, die sie eingekauft haben. „Was denkst du, wie viel ich für dich bezahlt habe?“, werfen Männer und Familie unverblümt den Frauen vor, wenn es Streit gibt. Natürlich fühlen sich die Frauen dadurch gedemütigt.

Doch es sind nicht bloß die Frauen, die durch derlei Faustrecht und fälschliche Informationen von Seiten der Vermittler verletzt werden. Auch ihre Ehepartner, die viel bezahlen mussten, sind im Prinzip ebenfalls Opfer. Sie und ihre Familienangehörigen mögen Täter von direkter Gewalt sein, gleichzeitig beklagen sie sich jedoch über Fehlinformationen von den Vermittlungsunternehmen, wodurch sie direkten wie auch indirekten Schaden erleiden. Sie sind Tag und Nacht in der Sorge, dass die Frauen bzw. die Schwiegertöchter jeder Zeit weglaufen könnten. So werden die Frauen von der ganzen Familie bewacht und kontrolliert. Um Flucht zu verhindern, verletzen sie ungehindert bestimmte Menschenrechte der Migrantinnen durch z.B. Isolierung, Kontrolle des Telefonverkehrs, Ausgangsverbot und dergleichen. Manchmal stacheln die Heiratsagenturen sogar zu solchen Maßnahmen an. Daher ist es notwendig, für Heiratsvermittlungsagenturen an Stelle der gegenwärtigen bloßen Meldepflicht verschiedene Regelungen und Kontrollen einzuführen, um die Zahl weiterer Opfer durch internationale Eheschließungen zu verringern.

### ***Drittens: Gesellschaftliche Vorurteile***

Die Mehrheit der Heiratsmigranten wird nach wie vor als Ausländer behandelt, selbst wenn sie die Staatsbürgerschaft erworben haben und ihre Kinder in Korea geboren sind. Bei Bewerbungen für Arbeit ist Diskriminierung gang und gäbe, obwohl sie sich einwandfrei als koreanische Staatsbürger ausweisen können. Stammen Heiratsmigranten aus Ländern, die im Vergleich zu Korea verhältnismäßig arm sind, werden sie oft durch Herabsetzungen und Vorurteile seitens ihrer Ehepartner und deren Familienangehörige verletzt. Gesellschaftliche und kulturelle Vorurteile

resultieren zumeist aus einer gewissen Unwissenheit, deren Ursache zum einen in der bisherigen Schulbildung liegt und zum anderen in den Berichterstattungen der Medien, die nur Teilaspekte betonen.<sup>15)</sup>

### 3. Koreanische Gesellschaft und Neusiedler<sup>16)</sup>

#### 1) ‚Tapfere Überläufer‘, ‚Nordkoreaflüchtling‘ und ‚Neusiedler‘

Bis Anfang der 1990er erhielten die Menschen, die aus Nordkorea flohen und nach Südkorea einreisten, aufgrund der Konkurrenz der Systeme zwischen den Ländern eine Sonderbehandlung. Die meisten von ihnen kamen vom Militär und wurden ‚Kwisun yongsa (Tapfere Überläufer)‘ genannt. Sie bewiesen die Kriegslust und Unmenschlichkeit Nordkoreas und die Überlegenheit des südkoreanischen Systems. Als lebender Beweis von hoher politischer Bedeutung erhielten sie von Seiten der südkoreanischen Regierung vollständige Unterstützung. Daher gab es zumindest vom ökonomischen Gesichtspunkt her kein allzu großes Problem bei ihrer Assimilation an die südkoreanische Gesellschaft. Jedoch bewirkten die große Flut im Jahre 1995 und die folgende ernsthafte Nahrungsknappheit eine Massenflucht der nordkoreanischen Bevölkerung. Menschen begannen aus Nordkorea vor allem über die Grenze zu China zu flüchten, um Nahrung zu suchen. Viele von ihnen reisten von dort in Drittländer wie Südkorea und andere ein.<sup>17)</sup>

---

15) Nachdem ein TV Programm nur über abgelegene Dörfer berichtet hatte, war ein Teil der koreanischen Bevölkerung von Vorurteilen vereinnahmt und glaubte, die Situation dieser Dörfer entspreche dem gesamten Niveau des Landes.

16) Am 10.01.2005 revidierte das Ministerium für Wiedervereinigung den Begriff 'Nordkoreaflüchtling' als 'Neusiedler'. Nach seinem Urteil enthielte das Wort 'Nordkoreaflüchtling' Vorteile und Ablehnung. Der Begriff 'Saetomin (Neusiedler)' bedeutet 'Menschen, die in einem neuen Ort hoffnungsvoll das Leben beginnen.' Sie wurden anfangs 'Tapfere Überläufer', dann 'Nordkoreaflüchtling' oder als 'Nordkoreanische desertierte Bewohner' bezeichnet, und nun werden sie 'Neusiedler' genannt.

17) Yun, In-chin, 2006. 'Pukhanijumin-úi sahoejógúng-kwa sahoet'onghap (Die gesellschaftliche Anpassung und Integration der nordkoreanischen Migranten)', in: Han'guk sahoehakhoe, Tongbuga 'tamunhwa' shidae han'guksanhoe-úi pyónhwa-wa t'onghap, Dezember, S. 80.

<Tabelle 5> Lage der nordkoreanischen Migranten nach Südkorea

Jahr	Vor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Gesamt
Anzahl der Personen	625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7,687

\*

(Quelle: Ministerium für Wiedervereinigung/ Stand: Dezember 2005)

Ab 2000 wurde die Motivation der ‚Neusiedler‘, wie die Nordkoreaflüchtlinge nun genannt wurden, vielfältiger, wie auch die Formen ihrer Flucht bzw. ihre Wege der Einreise. Der Anteil der Personen, die in Begleitung von Familienangehörigen kamen, wie Frauen, Kleinkindern, Jugendlichen, nahm zu. Als wichtige Veränderung war dabei festzustellen, dass jene Menschen nicht mehr nur aus existentiellen Motiven wie Nahrungssuche flohen. Vielmehr ergriffen sie zunehmend die Flucht, um ein besseres Leben zu führen, was nun eher dem Charakter typischer Migration entspricht. Die Zahl von Leuten, die geflüchtet sind, um in China Geld zu verdienen, ist gestiegen. Unter ihnen sind viele aus der mittleren oder höheren Gesellschaftsschicht und weniger aus der unteren. Ferner verstärkt sich auch die Bedeutung von Familienzusammenführungen: Die Nordkoreaner, die bereits in Korea Fuß gefasst haben, versuchen nun über einen Vermittler ihre Familienangehörigen aus Nordkorea zu holen, oder aus China, wenn diese sich bereits dort aufhielten. Folglich sind die nordkoreanischen Übersiedler als Migranten differenziert zu betrachten, je nachdem, ob sie als Flüchtlinge, als Arbeitsmigranten oder als Familienteil eingereist sind<sup>18)</sup>.

18) \*Flüchtling: Laut der Verfassung Südkoreas ist ein Nordkoreaner ein Bürger Südkoreas, jedoch werden gemäß dem Gesetz über Flüchtlinge Nordkoreas nur diejenigen als Flüchtlinge anerkannt, welche durch offizielle Institutionen außerhalb Koreas ihren Willen kundgeben, von der Republik Korea Schutz zu erhalten, und für welche „nach der Bearbeitung von Vorgängen, die dasselbe Gesetz vorschreibt, eine Entscheidung für den Schutz gefällt worden ist. Folglich ist die Gewährleistung des Schutzes eher selektiv und eingeschränkt. Die jüngsten Menschenrechte für Nordkorea in den USA erkennen die nordkoreanischen Flüchtlinge, die bereits in Südkorea Fuß gefasst haben, als vollständige südkoreanische Bürger an, so dass ihnen keine Berechtigung für einen Asyl bzw. für einen Flüchtlingsstatus erteilt wird. Gegenüber den nordkoreanischen Flüchtlingen, die noch nicht in Südkorea eingelebt sind, wird geäußert, dass sie zwar laut der südkoreanischen Verfassung Bürger der Republik Korea seien, jedoch werden sie

---

als Nordkoreaner betrachtet, so dass bei ihnen die Berechtigung für den Asyl und den Flüchtlingsstatus durch die USA nicht eingeschränkt werden darf.

\*Arbeitsmigranten: Sie flüchten aus Nordkorea und arbeiten illegal in China und in anderen Drittländern. Für die Einreise nach Südkorea kommen sie mit Hilfe von Vermittlungsorganisationen bzw. Unterstützerorganisationen über die Grenzen von China, der Mongolei, Thailand, Kambodscha etc. Nach der Einreise in Südkorea arbeitet die Mehrheit wie Arbeitsmigranten in den Bereichen der 3-D.

\*Getrennte Familie: Es ist ein Glücksfall, wenn die gesamte Familie gemeinsam einreist. Doch in den meisten Fällen bleibt ein Teil der Familie in Nordkorea zurück. Es gibt neue Formen von geteilten Familien: Teilweise sind sie während ihres Aufenthaltes in China wegen des unsicheren Status mit Chinesen liiert, so dass sie nach der Einreise nach Südkorea versuchen, über verschiedene Wege die restlichen Familienmitglieder zu holen, oder sie gründen mit Südkoreanern eine neue Familie.

